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5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전봉근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7. 5.**

발 표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신범철**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발 행 일 **2017년 7월 11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진원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 CONTENTS

|                         |    |
|-------------------------|----|
| 문제제기                    | 01 |
| 과거 북핵정책 평가 및 핵확산 이론의 교훈 | 04 |
| 북핵 환경 변화                | 14 |
|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전략구상안       | 22 |
| 고려사항                    | 32 |



---

# 1. 문제제기

» 2017년 출범한 한·미 정부가 각각 기존 '전략적 인내' 기조의 북핵정책을 버리고, 북핵 해결을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동원하는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수립과 실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최근 한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장,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핵물질 생산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핵무기 5개 수준 이상을 핵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수년 내 제2차 핵타격이 가능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어떤 외부공격도 억제하면서 군사·외교적 강압 행동을 자행할 것임.

● 둘째, 북한은 핵능력이 증가할수록, 향후 비핵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더 큰 외교·안보·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우리의 비핵화 및 안보 비용도 급증할 것이므로 최대한 조속히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긴요함.

● 셋째, 미 정부는 특히 최근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자신에 대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그 개발과 배치를 조속히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북한은 핵능력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비핵화 및 안보 비용도 급증할  
것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긴요...**

---

---

○ 넷째, 또한 북핵 해결이 긴요한 추가 이유로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인) 길-체인과 같은 첨단 고비용 국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북핵은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추세를 촉진시키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과 발언권을 확대시키며, ▲한반도에서 미중 갈등을 유도하여 위기를 고조시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북한 비핵화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5년간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경험과 근래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더욱 악화된 북핵 사태로 인하여 북핵 협상의 무용론과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만연함.

○ 따라서 이 보고서는 만연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좁게는 한국의 안보와 한민족의 생존, 넓게는 핵비확산을 통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시 모색하고자 함.

○ 우리의 대북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이 보고서는 이런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전략을 모색...**

» 이 보고서는 기존 북핵 해결방안이 실패한 주요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핵비확산 가치 등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 명분론에 기반을 둔 비핵화 처방에 집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실성과 실현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이 보고서는 후반부에서 비핵화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교훈을 찾고자, 지난 25년간 우리 북핵정책 평가, 타국 비핵화 사례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핵(비)확산 이론의 시사점 등을 토론했다.

---

## 2. 과거 비핵화정책의 교훈과 핵확산 이론의 시사점

### 가. 과거 북핵정책의 평가와 교훈

» 1980년대 말 상업위성을 통해 영변 핵 단지의 건설 동향이 알려지면서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한국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남북 핵협상을 개시한 이후 25년간 7개 정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북핵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북한의 핵개발 지속으로 실패하고 말았음.

- 아래 표는 정부별 북핵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평가하고, 북핵정책의 실패 원인을 제시하였음.

### 이전 각 정부의 북핵정책 특징과 평가

| 정부               | 북핵정책 특징  | 평가  |
|------------------|--|---|
| 노태우<br>(1988-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기본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 합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산권 붕괴로 인한 대북 우월적 지위를 남북관계 개선에 이용, 그러나 비핵화 활용에는 실패</li> </ul>  |
| 김영삼<br>(1993-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NPT탈퇴 선언, 1차 북핵위기 발생(93.3)</li> <li>제네바합의(1994) 이후 북핵문제 관리 국면 진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 사망, 조문파동으로 남북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 기회 상실</li> <li>외교안보팀의 준비·지식 부족 및 내부 이견으로, 반증 위주의 혼선된 북핵정책 추진</li> </ul>  |
| 김대중<br>(1998-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핵협상 카드론(안보 위협 해소 시 핵 포기 판단) 인식</li> <li>남북관계, 미북관계, 비핵화의 불균등 진전</li> <li>햇볕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네바합의(1994)로 북핵 부담 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가능</li> <li>김대중 정부의 '북핵 협상카드론', "북핵은 미북 간 문제" 판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진전으로 전환할 기회 상실</li> </ul>                                    |
| 노무현<br>(2003-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시 정부, 농축핵 의혹 이후 제네바합의 폐기로 북핵위기 재연</li> <li>북한, NPT 탈퇴 선언, Pu 공개(2004.1), 1차핵실험 (2006.10) 등 본격 핵개발</li> <li>북한, 6자회담 참여로 핵개발과 핵협상 병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1 테러 여파로 미국의 강경책 선회(2001)</li> <li>노무현 정부, "북 핵개발 주장 일리 있다(2004)", 종전선언 발언 등 한미 갈등으로 북핵외교 공간 위축</li> <li>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 국내 안보세력의 반발로 남북관계 진전 한계</li> </ul> |
| 이명박<br>(200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김정일 뇌졸중(2008)으로 위기의식 고조 및 핵개발 가속화</li> <li>중국, 공세외교, 북중관계 긴밀화로 대북 제재 무력화</li> <li>한국, 전략적 인내의 소극적 북핵 정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정책에 낮은 관심 및 한미동맹 강화에 외교력 집중</li> <li>한미 '전략적 인내' 속, 북한 핵능력 증가(시간 벌기) 결과 초래, 북한 내구성, 핵능력·의지 과소평가 오류</li> </ul>  |
| 박근혜<br>(2013-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2012-)의 핵무장 가속화</li> <li>한·미: UNSC 제재결의 강력 집행,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전략적 인내 기조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붕괴론으로 핵협상·남북경협 무용론 만연</li> <li>코리아 포물라, 5자회담, 창의적 비핵화 방안 모색했으나, 4, 5차 북핵실험으로 무산</li> </ul>   |

» 특히 아래와 같이 과거 비핵화정책의 문제점에 주의하여, 앞으로 이런 과오를 반복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 북한 정권과 체제 내구성을 과소평가하는 과오를 저질렀음.

-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결과 ‘시간별기’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와 핵합의 이행에 소홀히 대처하고, 이후에도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 ‘전략적 인내’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장 동기 강화와 시간별기에 이용되었음.
- 따라서 새로운 비핵화 전략은 북한 붕괴론을 경계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역량, 체제 내구성 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최근 국내외에서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핵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도 경계해야 할 것임.

## 북한은 매우 높은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통상적인 비핵화 해법이 작동하지 않지만...

» 둘째, 북한은 매우 높은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통상적인 비핵화 해법이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핵화 참조모델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어려운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쉬운 비핵화 사례를 참조하였음.

-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사례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사실상 핵국’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대북 제재와 압박의 관건이 되는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이는 또한 중국의 대북 전략, 북중관계의 지정학적 특수성, 최근 미중 세력경쟁의 심화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임.
- 따라서 새로운 비핵화 전략은 (1) 다른 나라의 비핵화 실패와 성공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그 성공과 실패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2) 남북한의 외교안보와 국내정치적 환경 역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3) 미중 세력경쟁이 한반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4) 한반도 상황에서 재현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성공요인을 조합한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전략’을 개발해야 함.

○ 새로운 비핵화 전략은 우선 국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 전문가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이를 주변국 주요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모든 국가들이 수용 가능한 전략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표〉 타국 비핵화 사례와 모델 비교

| 모델               | 특징과 성공 요인  |
|------------------|--|
| 아르헨티나-브라질식(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냉전기 민간정부 등장, 안보경쟁 중단으로 자발적 핵개발 포기</li> <li>상호사찰 실시로 핵투명성 상호보장</li> <li>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참조 모델</li> </ul>                              |
| 우크라이나식(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구소련 붕괴로 핵무기 인수, 핵 포기 자세</li> <li>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제공과 핵 포기 교환</li> <li>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의 참조모델</li> </ul>                        |
| 리비아식(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중재, 미국의 정권교체 불추구,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 보상 약속</li> <li>리비아의 핵개발 기획 단계, 미국의 제재해제 시 석유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으로 핵포기 용이</li> </ul>                    |
| 남아공식(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냉전기 주변국의 안보위협 해소, 정권교체로 자발적 핵포기</li> <li>유일한 핵개발 이후 핵포기 사례</li> </ul>  |
| 파키스탄 인도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상 핵국으로 북한의 핵무장 모델</li> <li>NPT 비가입국으로서 NPT 탈퇴국인 북한과 차이</li> </ul>   |
| 이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한 제재; 이란의 온건파 정권 등장, 미-이란 최고위 대화채널, 개방경제, 유럽의 협상파트너로서 신뢰 획득 등</li> <li>이란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과 일부 농축능력 인정</li> </ul>                     |
| 한반도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핵무장 의지 과시, 유일 NPT 탈퇴국, 핵개발 완성</li> <li>한반도 특유의 환경 고려(분단, 미중경쟁, 체제경쟁, 일인독재 등)</li> <li>타 비핵화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핵심 요소 추출 및 결합</li> </ul> |

» 셋째, 남북 간, 미북 간 간 뿌리 깊은 적대감과 불신이 핵협상 붕괴의 근저에 있어 통상적인 협상과 합의, 그리고 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비핵산 대중요법과 북핵 일괄해결방안에 의존하였음.

○ 북핵문제는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대북 경제지원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진전 등과 같이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작업이 필요함.

○ 현재 남북 간, 미북 간 신뢰수준에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북핵문제의 일괄 해결이 아니라, ▲동결을 위한 예비협상, ▲북핵활동의 동결, ▲중간 비핵화 단계 (불능화, 폐기일정 합의 등), ▲CVID 완성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넷째,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잦은 변경(햇볕정책, 정권교체, 전략적 인내, 봉쇄 압박, 협상주의 등)이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북핵 합의의 이행에 장애를 초래함.

○ 북한은 한미의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때로는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기다리거나(북한판 '전략적 인내'), 때로는 핵협상과 핵합의에 참여하면서도 핵심 비핵화 조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만하는 헤징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남갈등 해소, 한미공조 유지, 한중협력 유지 등이 필요함.

≫ 다섯째, 북한의 반복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핵·미사일 도발 사전포착, 북한 비난, 안보리결의 채택 등)에 매번 집중하느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회를 상실함.

○ 우리 비핵화전략은 북한의 핵개발 고수 전략, 외부 제재와 압박에 대한 저항성 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방적 정책과 기대만으로 구성되어, 북한의 핵개발 지속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취하는 동시에 이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토록 함.

≫ 여섯째, 북핵문제는 북한의 생존, 남북 세력경쟁, 이념충돌 등 세력정치와 이념적 요소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설득, 경제지원, 신뢰구축, 북핵의 불법성, 비도덕성 부각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오를 저질렀음.

○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존의 국제법적, 국제 규범적 접근에 더해 “안보 대 안보”, “이익 대 이익”, “위협감축 대 위협감축(상호위협 감축)”의 교환과 균형을 모색하는 조치가 필요함.

○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선행을 바꾸는 작업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임박한 핵무장과 전쟁위기를 맞이하여 규범적, 경제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선행”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은 “안보 대 안보”, “이익 대 이익”, “위협감축 대 위협감축(상호위협 감축)”의 교환과 균형을 모색...

## 나. 핵(비)확산 이론의 교훈과 시사점

»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에 대해 명료한 설명 틀을 제시한 스캇 세이건 스탠포드대 교수의 3개 핵확산 모델, 그리고 자크 하이만스 교수의 국가정체성 모델에 기반하여 핵확산 동기와 현상을 설명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토론하고자 함.

○ 핵확산의 역사와 동기 분석을 위한 주요 문헌으로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1996),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2006), Scott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Debate Renewed(2002), Thomas C. Reed and Danny B. Stillman, The Nuclear Express: A Political History Of The Bomb and Its Proliferation(2010) 등을 참조하였음.

» 핵비확산 전문가로 저명한 스캇 세이건 스탠포드 교수는 국가들의 핵무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기 위하여 ▲안보 모델, ▲국내정치 모델, ▲규범 모델 등 3개 모델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도 ‘안보’를 가장 핵심적인 핵무장 결정요인으로 제시함.

○ 안보모델에 따르면, 한 국가로 다른 국가로부터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핵확산의 '전략적 연쇄반응' 또는 '핵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미국 핵위협에 대응한 소련의 핵무장,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장, 미국과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한 중국의 핵무장, 중국에 핵위협에 대응한 인도의 핵무장, 인도 핵위협에 대응한 파키스탄의 핵무장,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북한의 핵무장 등이 있음.

○ 안보모델에 따르면, 안보위협이 해소되면 핵무장의 포기도 가능한데, 그 사례로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핵개발 포기 등이 있음.

○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컬럼비아대 교수는 국제체제의 성격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신 현실주의 관점에서, 현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적대국가의 핵무장에 대해 자국의 핵무장만이 군사적 균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이때 평화가 보장된다는 '핵 평화론(nuclear peace)'을 주장하였음.

○ 한편, 세이건 교수는 안보 모델이 핵무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기반한 핵억제의 비합리성과 위험성에 주목하여, 핵확산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절박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 학자들은 안보 요인 이외에 국내정치적 요인, 규범적 요인, 핵공급 여건 등에 주목하였음.

○ 규범 모델에 따르면, 현 NPT 체제가 작동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핵무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주변국의 제재와 견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국의 안보가 취약해지는 '부정적 안보효과'를 우려하여 '핵자제(nuclear forbearance)'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 스웨덴, 리비아, 남아공, 이란 등이 이에 해당됨.

○ 규범 모델의 또 다른 설명 방식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핵 비확산의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가 대변하는 강대국 지위, 자주성 등의 상징성을 중시하여 핵무장을 선택하는데, 이는 유사한 안보환경에서 핵무장의 선택을 달리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남북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

---

» 규범 모델의 한 부류에 속하는 자크 하이만(Jacques Hymans) 남가주대 교수에 따르면, 핵무장 결정 여부는 결국 정치지도자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민족주의자(oppositional nationalist)” 성향을 갖는 정치지도자들이 핵무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함.

○ “적대적 민족주의자” 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은 적국에 대해 영합적 안보관을 갖고, 또한 자국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이는 지도자들로서,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결정과정에서 그런 정치지도자의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핵개발 경쟁과정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지도자의 부재가 핵무장 포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 포기 결정과 북한의 핵무장 결정도 그런 ‘적대적 민족주의’ 정치지도자의 존재 유무, 그리고 핵무장이 초래할 국제 핵비확산 레짐으로 인한 부정적 안보효과에 대한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상기 핵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북핵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한 국가의 핵무장 결정은 안보 환경의 악화, 정치지도자의 핵무장 결정, 국내 정치적 필요성, 핵능력 공급 조건, 국제 비확산 레짐의 효과 등 다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경우에도 한 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요 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킬 때 핵비확산의 성공가능성도 커질 것임.

---

**핵무장 결정은 안보환경의 악화, 정치지도자의 핵무장 결정, 국내 정치적 필요성, 핵능력 공급 조건, 국제 비확산 레짐의 효과 등 다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 둘째, 핵확산의 가장 설명력이 높은 안보 모델에 따르면, 핵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위해 북한의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할 것임.

- 안보 모델에 따르면,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남북대화과 설득 및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기존 비핵화 노력이 결국 북한이 인식하는 안보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런데 안보 모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핵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 핵우산은 다시 북한에게 핵위협으로 간주되는 등의 안보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최근 한미 정부가 공히 천명한 대북 적대시정책, 무력공격, 인위적 통일, 정권 교체와 체제붕괴 등을 추구하지 않는 소위 ‘4 NO’ 정책을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결국 쌍방이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상호 위협감축 구상’이 필요함.
- 한편, 한미가 북한의 안보위기를 감소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내부 국내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정체성 등의 규범적 이유로 핵무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 모델도 있어, 안보위협 감축 조치가 결국 북한에 대한 실효성 없이 한국의 안보만 훼손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 셋째, 규범 모델에 따라, 지도자의 정체성에 따른 인식적 결정이 핵무장의 핵심적 요인이라면, 일반적인 외교적 압박책과 유인책 등을 통해 핵무장의 비용과 혜택의 셈법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핵무장 결정을 변경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때 북한 정치지도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인식 전환을 시도하거나, 또는 북한의 정치지도자 교체를 추구하는 대안도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정치지도자의 고착된 인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한 북한 정치지도자의 교체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설사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북한의 일사불란한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유사한 정체성 인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음.

---

» 넷째, 핵무장이 상대국의 핵확산을 촉발한 ‘전략적 연쇄반응’ 현상과 핵무장의 상호 균형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핵평화론’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이 증강되고 핵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핵무장 추구 가능성이 증가함.

-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안보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또한 핵무장의 외부적 비용이 과다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

## 3. 북핵정책 환경의 변화

### 가. 국내외 도전 요소

#### (1) 북한의 핵 억제력 확보 추구하고 핵보유국 정체성 정착

▶ 북한의 핵무장 제도화와 국가정체화로 비핵화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 북한 개정헌법(2012.4) 서문: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
- 경제건설핵무장 병진노선 추진: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여, 핵보유의 합법화, 핵무력의 확대 강화,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을 최고 수준의 국가정책으로 선언하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동 병진노선을 재확인함.
-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함.

▶ 북한은 스스로 인식하는 절박한 체제위기와 안보위기를 해소하며, 또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 보복력 구축을 목표로 하여 핵무기 다원화와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어, 어떤 외부의 압박과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핵 보복력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한미동맹의 공격을 억제하고, 또한 핵 보유국법에서 천명한 이차 핵 보복 능력을 최단 기간 내 갖추기 위해서 향후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기술 개발과 미사일 발사 잠수함 개발 등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북한이 2차 핵 타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외부로부터 선제공격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므로, 취약한 과도기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핵 선제공격’ 또는 ‘비대칭 확산’ 등 매우 공세적인 핵전략을 구사하며, 핵능력 증강에 집중할 것임.
- 한편, 핵 보복력 구축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기만책의 일환으로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미중 세력경쟁

» 중국의 강대국 부상 이후 중국이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의 유인 효과가 급감함.

- 과거 미국의 북한에게 안전보장 제공, 한국은 경제지원을 최대 유인책으로 활용하였으나,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이 가능한 대체재로 등장하였음.

» 미중 간 세력경쟁, 일중 간 세력경쟁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에게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가함.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통상압력을 유보하는 등 미중 간 대북정책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와 같이 충분치 않거나, 또는 미중 간 세력경쟁이 타 분야에서 불거질 경우, 대북 협력체제가 완화되거나 와해될 가능성이 있음.

---

### (3) 국내 남남갈등과 한미 갈등 가능성

»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이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기존 10년간 보수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정책 틀에서 크게 선화하여 대화협력 중심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 및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세력과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첫 문-트럼프 정상회담에 아래와 같은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잠재적인 갈등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전 추진
- 북핵정책 주도권과 유인책 제공
-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연 가능성
-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행사 및 남북대화과 교류협력 속도
- 한미일 군사협력의 양상과 속도

» 한반도 평화론, 남북 중심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한국 안보론과 한미동맹 중심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아래와 같이 북핵문제의 해결방식과 접근법에 대해 이론적이며, 선형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대화와 각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북핵 접근법 비교: 평화/남북론 vs. 안보/동맹론

| 한반도 평화론, 남북 중심론   | 한국 안보론, 한미동맹 중심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핵 해결의 단계적 접근법을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선호</li> <li>북핵 해결의 “all or nothing” 일괄해결을 추구할 경우, 북한 핵무장 완성, 군사외교적 강압, 비핵화 가능성 소멸 등의 “nothing”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이 보고, 그 위험성을 크게 우려</li> <li>북한과 대화 시, 설득 가능성 및 이익의 공통분모 모색 가능성 높게 평가</li> <li>북핵 단계적(동결) 접근법의 위험성보다 현 상태 지속(북한의 핵무장 지속,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국방력 증가, 대북제재압박 강화, 북한 굴복 또는 내부 변화 가능성)의 위험성을 더 낮게 평가하여, 전자 접근법 선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핵 해결의 “all or nothing” 일괄 해결법 선호; 전면적 제재압박 시 북핵 해결 가능성 증가 평가; 중간적 접근 시 북한의 호응 가능성 낮게 평가; 설사 호응하더라도 기만책으로 판단</li> <li>김정은 체제 하에서 비핵화는 불가능 판단하며, 대화제안은 핵무장 시간 벌기용의 기만책으로 판단</li> <li>현재의 북한 핵무장 위험성</li> <li>북핵의 ‘단계적 접근’, 동결 우선 추진 시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이용당하며,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 동결의 장기화로 완전 비핵화 목표 상실, 동결을 위해 협상 레버리지 소진, 동결을 평화로 오인하여 한미동맹 및 국방력 약화 등을 크게 우려</li> <li>북핵 단계적(동결) 접근법의 위험성보다 현 상태 지속(북한의 핵무장 지속,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국방력 증가, 대북제재압박 강화, 북한 굴복 또는 내부 변화 가능성)의 위험성을 더 낮게 평가하여, 후자 접근법 선호</li> </ul> |

## 나. 국내외 기회 요소

### (1) 한미 정부의 북핵 해결 우선 및 대북정책 공조체제 확보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집중 방침 및 동 행정부의 아래와 같은 정책기조를 북핵 해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1)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 2) 북핵문제를 최우선 안보과제로 간주, 3) 최대의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 성과 도출 모색, 4) 중국의 역할 압박 및 미중 협력체제 구축, 5) 체제붕괴, 정권교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진출 불추구 등
- 특히 북핵 해결의 관건이었던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대중정책으로 천명하였던 무역적자와 환율문제까지 양보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가 오로지 북핵문제에만  
집중하는 실용외교를 추구함에 따라,  
미북 간 북핵문제에 집중한  
대화 가능성이 증가...

---

○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규범적·도덕적 접근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등 정치적 의도를 항상 의심하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오로지 북핵문제에만 집중하는 실용외교를 추구함에 따라, 미북 간 북핵문제에 집중한 대화 가능성이 증가함.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과 공동성명(2017.6.30)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며,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방법 등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며, ▲대북 적대시정책·정권교체·체제붕괴·공격·통일가속화 불추구 등에 합의하였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 하려는 한국의 열망을 지지하였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접근과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등 대북정책 기초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정부와 한국의 진보정부 간에는 기본적인 철학과 방법론의 차이 점이 있어, 이런 차이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협상법과 탄핵 문제 등 국내정국 요인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집중성과 현 정책기조의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 (2)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적극 추진 의지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공약, 대통령 연설의 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대북 접근과 북핵해결 의지를 천명하였음. (비핵화 평화구상, 제주평화포럼 메시지,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등)

-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하여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대화를 개최하고자 함.
- (북핵 병행 추진원칙)북한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미북관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함.
- (북핵대화 조건)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 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개최함.
- (동시행동 원칙) 북한의 선 행동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추구함.
- (경제공동체)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 기반임.
- (남북관계)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 재개를 추구하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이행함.

## (3)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및 북핵협상 제안

» 북한은 핵무장 증강을 지속하면서도 대북 제재압박체제 훼손 및 완화, 남남갈등 유발, 한미공조 훼손, 식량난 완화, 미북 평화협정 등을 목표로 평화와 대화공세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런 북한의 대화공세를 북핵 협상과 남북대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집중성과  
현 정책기조의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

---

필요에 따라 이런 북한의 대화공세를 북핵 협상과 남북대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

---

○ 그런데 이런 북한의 대화공세가 기만책일 가능성이 높아, 대화를 위한 선제적 양보를 자제하고, 대화의 명분도 잘 찾아야 할 것임.

» 북한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동 제안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함.

○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할 것을 촉구하여 사실상 남북군사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무장이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조건(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미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 및 검증 수용, 미국 핵무기 한반도와 인근지역 반입 금지 보장, 대북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험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를 제기하면서 핵협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 당시 북한 대변인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이며 김정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주장하였는데, 2013년 핵보유국임으로 선언한 이래 처음으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여 주목받음.

○ 당시 한미 정부와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안을 제재약화를 위한 기만책으로 일축했지만, 일부는 동 대변인 성명을 협상 의사와 의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며 향후 핵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북한이 오랜만에 ‘비핵화’를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한 미군 철수 선포’로 완화하였으며, 기타 4개 핵 관련 조건도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다른 북핵 합의에서 합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지적함.

- 향후 이런 제안을 활용하여, (1) 북한의 요구와 의도를 알아보기나, (2) 잠정적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탐색적 예비대화” 개시 가능함.

**북핵 정책 환경의 기회와 도전 요인 분석**

| 국내    | 강점/기회요인  | 약점/도전요인  |
|-------|--|--|
| 국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의지</li> <li>•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및 동맹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가능성</li> <li>• 북한붕괴 기대로 인한 대화협력 거부감</li> </ul>   |
| 북한/남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전쟁위기</li> <li>• 북한의 군사회담, 핵 회담 제안 가능성</li> <li>• 한국의 대북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능력 증강</li> <li>• 북한 핵.미사일개발(6차 핵실험, ICBM 발사시험) 지속 가능성</li> <li>• 김정은 정권의 강한 핵무장 의지와 국가정체성</li> <li>• 북한의 핵문제 '통미봉남' 입장</li> </ul>   |
| 미국/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 우선 정책, 대중 압박 및 미중 협력체제 유지</li> <li>• 중국: 대북 제재압박 점진적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불량국가 북한과 대화 거부감; 핵합의 파기에 대한 높은 불신감</li> <li>• 트럼프 대북정책의 지속성 여부</li> <li>•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시험 시 강경책 전환가능성, 장거리미사일 요격 가능성</li> <li>• 미중 간 세력경쟁</li> <li>• 중국의 북한 안정 중시, 강한 압박제재 거부</li> </ul> |
| 기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협상의 반복적 파기로 고도의 상호불신(미북 서로 상대 불신)</li> </ul>   |

---

## 4.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전략구상안

### 가. 새로운 비핵화 및 평화정착 추진체계 구성 제안

»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군사적 대북 억제·방어·보복조치,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개선과 북한변화 등 3개 정책과제를 보완적으로 병행추진해야 할 것인 바, 여기서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정책과제만 토론하고 전략구상을 제안하고자 함.

####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비전과 목표

##### a. 비전

---

실현가능한 중간 단계 목표로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제시함

---

» 한반도 비핵평화공동체 실현

○ 실현가능한 중간 단계 목표로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제시함.

» 여기서 제시한 ‘비핵·평화공존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분단체제 하에서 달성

가능한 현실주의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이는 분단의 2국 체제를 전제로 한 것임.

○ ‘평화공존’은 원래 냉전기에 소련이 계급혁명을 세계로 수출한다는 미국과 자본주의진영의 비난과 우려에 대해, 혁명 수출을 부인하며 양 이념진영의 공존 가능성을 이론화 한 것임.

---

○ 한반도에서 ‘비핵평화공존체제’는 비핵화가 거의 완성되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북한이 2국 체제를 인정하며, 양 체제와 이념의 공존을 유지하는 체제로서 이는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행위 금지,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경계선 존중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계승하고 실현하는 것이기도 함.

○ 비핵평화공존체제의 주요 요소로 남북기본협정체결(기본합의문 플러스), 주변 4국 남북 교차승인 완성,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활동 동결 및 불능화,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 4자 평화포럼 가동 및 한반도 평화선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경제협력 제도화, 동북아 안보협력대화 가동 등을 들 수 있음.

○ 비핵평화공존체제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평화 상태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이 적대적 대치상태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낮은 단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며, 일정 부분 대치와 경쟁관계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전제로 함.

## b. 전략목표

≫ 아래 4개 전략목표를 병행 추진함.

- 북한 비핵화 실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현
-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 (2) 비핵화 추진 원칙과 기초

≫ 첫째,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기하여, 이에 따라 대화를 통한 합의 달성 및 충실하고 검증 가능한 이행이 동반되어야 함.

---

○ 9.19 6자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둘째,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추진 원칙으로 포괄성, 호혜성(상호성), 단계성, 동시병행 원칙을 제기함.

○ 첫째,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당사국 및 관련국의 모든 우려와 관심사항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추구하여야 함.

○ 둘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일방의 요구를 타방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합의를 달성해야 하는 데, 이는 특히 북한과 합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임.

○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조치는 개념적으로 ‘등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기하나, 실제 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시정하는데 대해, 우리 측이 정치·경제·외교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이들 조치의 ‘등가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논쟁적이며 어려운 과제임.

○ 셋째, 단계성 원칙에 따라, 긴급하고 타결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이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북·미와 남북 간 극심한 상호 불신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함.

○ 넷째, 병행추진과 선순환 추진 원칙은 관련 프로세스(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등)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며, 만약 이들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진전된다면 상호 보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만, 불균형이 있다면 오히려 타 분야의 진전을 저해할 것임.

≫ 셋째, 북한 비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불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 핵무장 기정사실화, 북한 붕괴론, 핵협상 무용론 등을 경계해야 할 것임.

---

» 넷째, 북핵 정책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대북정책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이 충분치 않다면, 조그만 북핵의 군사,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도 대북정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재가동이 매우 어려울 것임.
- 또한 효과적인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북핵 정책에 대한 관련국의 정치·외교적 지지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지만, 개별국가의 국내정치적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과제가 될 것임.
- 실제 한·미 간 대북정책도 ‘공조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권 성향의 교차로 인해 일관적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또한 대북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 나. 비핵화 해법 및 단계적 전략로드맵 작성

» 위에서 토론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사전단계- 동결-완전 비핵화 등), 다원적(비핵화-남북-북미-평화체제-동북아 병행), 포괄적(경제에너지 포함) 전략로드맵을 작성함.

- 정부 차원에서 창의적이며, 실현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를 제기함.
- 포괄적, 단계적 접근법의 참조모델로 비핵화, 군비통제, 남북관계(정상회담, 남북 기본조약 체결, 상주대표부 설치), 동북아 협력 등을 3단계(평화협력 기반조성—심화—

---

창의적이며, 실현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제기...

---

---

정책)로 나누어 테이블을 작성한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한반도 포럼, 2012)』20쪽 참고

» 비핵화 단계는 크게 개념적으로 북핵 동결과 완전한 비핵화 등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동결조치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를 설치하고, 북핵 동결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입구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임시중단 선언을 제시함.

- (1) 북핵 동결 사전단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및 9.19 공동성명 재확인 선언, 동결 협상 개시, 6자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담 개최, 남북·미북·북중 대화 활성화
- (2) 북핵 동결단계: 북한 핵물질 생산 동결 및 감시, IAEA 감시 재개, 핵·미사일 시험 동결
- (3)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비핵화 단계: 장기간 소요 예정으로 사실상 ‘2단계’로 나누어 핵폐기 추진(우선 핵시설 폐쇄, 불능화, 신고를 우선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핵무기 폐기 완료 추진), 북한 NPT 완전 복귀, 북한은 비핵국가로 IAEA 전면안전조치 수용
- 비핵화 전략로드맵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위에서 토론한 핵확산 ‘안보 모델’에 따라, 이익 대 이익, 안보 대 안보, 그리고 ‘상호 위협 감축 구상’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로드맵(안)

| 핵심<br>프로세스                   | 북핵동결<br>사건단계<br>-예비협상   | 1단계<br>북핵 동결<br>-비핵평화공존체제<br>기반조성   | 2단계<br>비핵화 완성<br>-비핵평화공존체제<br>완성  |
|------------------------------|---|---|---|
| 비핵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결협상의 입구) 북한, 핵·미사일시험 중단선언(모라토리움), 9.19 공동성명 재확인 선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물질생산 동결 및 감시; IAEA 감시 재개</li> <li>• 핵·미사일 시험 동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시 2단계로 세분하여 추진: 핵시설 폐쇄·불능화·신고 → 핵 폐기 완료</li> <li>• 북한 NPT 복귀, IAEA 전면안전조치 수용</li> </ul> |
| 평화체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 평화포럼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한반도평화협정 체결</li> </ul>  |
| 6자회담.<br>동북아<br>안보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 수석대표 비공식회담 개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 장관회담 개최, 핵동결 일괄타결 합의</li> <li>• 대북 인도지원 제공</li> <li>• 미북, 일북 수교회담 개시</li> <li>• 대북 개발지원용 동북아은행 설치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6자 정상회담 개최</li> <li>• 동북아 안보협력체 가동; 동북아 원자력공동체 설치</li> </ul>                         |
| 남북관계<br>경제협력<br>군사회담<br>군비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비방 중지</li> <li>• 특사 교환, 남북대화(고위급회담) 개최</li> <li>• 인도지원(영유아, 의료·보건) 개시</li> <li>• 이산가족상봉 실시</li> <li>• 군사적신뢰구축 조치: 군직통전화, 훈련참관, 군사회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본합의서 재확인, 과도기적 2국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li> <li>• 남북 정상회담, 군사회담 개최</li> <li>• 남북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li> <li>• 인도,농업,환경,의료적 지원 확대</li> <li>• 남북러, 남북중 삼각 경제,에너지,수송 협력 추진</li> <li>• 운용적 군비통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러,남북중 에너지 수송망 연결</li> <li>• 남북경제공동체 가동</li> <li>• 구조적 군비통제</li> </ul>                  |
| 미북관계<br>한미동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규모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조정</li> <li>•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본격 추진</li> </ul>  |   |

## 다. 북핵·미사일 동결 추진전략

### (1) 긴급 북핵 동결 및 역내 안보현안 해소를 위한 ‘미니 일괄타결’ 추진

‘미니 일괄타결’방안의 검토를 제기하며,  
특히 2.29 북미 합의(2012년) 복구를  
모색할 필요...

» 북핵문제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핵화의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조치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미니 일괄타결’방안의 검토를 제기하며, 특히 2.29 북미 합의(2012년) 복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및 미중 간 대치국면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핵 동결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연계하여 현 경색국면의 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남북, 미북 간 다수 현안이 있는바, 상호 요구사항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계적인 합의와 이행이 가능할 것임.

● 특히 미니 일괄타결을 위해 핵활동 동결을 규정한 2.29 북미 합의(2012) 복구가 필요한바, 진전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외교적 유인책을 활용토록 함(“2.29 미북합의 플러스”).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미북 대화를 적극 활용하고, 5자회담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새로이  
가동할 것을 제기...

●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미북 대화를 적극 활용하고, 5자회담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새로이 가동할 것을 제기함.

● 기존의 대화채널 이외에도, 정부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동북아 전략대화’ 개최를 제기하는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위기관리, 군비경쟁, 투명성 증대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

---

## (2) 주의 및 고려 사항

» 북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함.

» 첫째, 북핵동결은 북핵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과도기적 임시단계이므로, 자칫 핵동결을 비핵화 목표와 동일시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단계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둘째, 북핵 동결단계에서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제재가 해제되면 대북 압박요소도 소멸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보리 결의의 주요 제재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추가적인 제재를 중단하거나,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조치는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북한과 대화하며 신뢰를 얻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안보 모델 및 지난 25년 북핵 정책의 교훈에 따르면) 별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실제 고통을 느끼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 현실주의적 유인책을 활용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실제 고통을 느끼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 현실주의적 유인책을 활용...**

---

○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비핵화의 진전은 실질적인 이익의 균형, 안보의 균형, '상호위협감축' 등에 부합할 때 비로소 합의 가능하며, 또한 실천성도 보장될 것임.

○ 아래 표 <북핵 동결 성패에 따른 남북미중의 추정 손익계산표>에 따라, 관련국의 손익을 파악하고 전달하여, '동결' 필요성에 대한 관련국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

▶ 넷째,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고, 또한 ‘규범모델’의 교훈에 따른 핵확산 결정에서 정치지도자의 인식과 역할을 감안할 때, 비핵화 협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제시함.

● 남북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면 비핵화 진전에 크게 효과적일 것이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대북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 앞서, 국내와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내의 높은 지지도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지지는 이런 합의와 공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여섯째,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5.24 제재조치 해제 등 경제협력 제공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와 상충 가능성, 국내와 미국 내 안보론자들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함.

● 남북 간 협력사업의 재개는 덜 논쟁적인 보건, 의료, 농업, 환경, 인도적 차원 등에서 시작하고, 동결 단계에 접어들게 될 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의 완화 추세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을 추진토록 함.

● 논쟁적인 남북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는 대신, 국제화 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개방을 촉진하고, 대북사업에 대한 반대론자의 반발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는바, 이런 국제사업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한반도 연장차원에서 북한 개발지원 및 남·

북·중 간 기차·도로망 연결사업 추진, ▲AIIB에 북한 참여 독려 및 동 은행을 통한 북한지역 개발 사업 지원, ▲러시아가 참여하는 남·북·러 가스, 전기, 수송 연결사업 및 동 사업에 미국기업 참여 유도 등을 제안함.

---

논쟁적인 남북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는 대신,  
국제화 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

---

북핵 동결 성패에 따른 남·북·미·중의 추정 손익계산표

|    | 동결의 혜택/유인책   | 동결 불발의 손실/억제책  |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증강 저지</li> <li>• 남북대화·교류·경협 기회 확대</li> <li>• 남북정상회담 가능성</li> <li>• 평화협정 논의 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악화(화해교류 기회 상실) 및 대화 차단</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ICBM 개발진전 저지</li> <li>•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미사일능력 증강 및 장거리 ICBM 완성 가능성</li> <li>• 대중 북핵 제재 압박 및 미중 갈등 가능성</li> </ul>                                 |
| 북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적대시 정책 중단</li> <li>• 북미대화(고위급) 개최</li> <li>• 새로운 북핵 합의의 성과</li> <li>•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대북 추가제재 중단,</li> <li>• 한국, 미국,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식량, 의료 등) 제공</li> <li>•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 위협 감소</li> <li>• 북중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증가(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li> <li>•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위협(중·러의 석유공급,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유엔 축출 등)</li> </ul>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li> <li>•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지연·동결 가능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중국 비난, 경제 보복조치(통상·환율) 가능성</li> </ul>  |

---

## 5. 고려사항

### 가. 북핵 전략 T/F 운영

» 2017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가 탈 냉전기 들어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안팎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한 조직 재정비와 정책역량의 증대가 요구됨.

-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핵무장 진전, 중국의 세계적 강대국 부상,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미국 패권 도전 및 미중 간 안보경쟁 격화 등의 안보환경의 급변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조직과 역량은 과거와 대동소이하게 별 변동이 없는바, 폭증한 외교안보 현안의 관리와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우리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기함.

---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상설 북핵 태스크포스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운영할 것을 제안...

---

» 이를 위해 첫째,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단일 정부조직과 전문가그룹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상설 북핵 태스크포스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둘째, 북핵문제의 한반도적, 외교적, 국방적, 국내정치적 성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비핵화전략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 한·미관계, 강대국정치, 핵 비확산, 핵공학, 국제안보, 국내정치 등 분야의 전문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
- 셋째, 정책공동체 차원에서도 비핵화정책과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 핵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 넷째, 국가안보실의 주도 하에 정부 정책기획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외교안보 위기관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상응하는 위기관리절차도 수립해야 할 것임.

## 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안보·평화·통일 등 3개 가치의 관계 정립

» 대북정책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목표)로서 안보·평화·통일 등 3개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와 상호관계를 둘러싸고, 국민 개개인의 경험 또는 선행적 판단에 따라 안보 제일주의, 평화제일주의, 통일제일주의 등의 노선이 서로 충돌하며 남남갈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보·평화·통일의 병행추구 원칙 하에서 ‘안보·평화·통일’의 우선순위를 제기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한반도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항상 일방이 타방을 무력으로 통일 하려는 전쟁위기가 상존하고, 특히 북한정권의 공격성과 핵무장에 직면하여 한국에게 ‘안보’는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가치임.

- 흔히 말하듯이 ‘안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 평화이자, 거짓 평화이며, 안보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평화와 통일도 가능함.

» 둘째, ‘평화 없는 안보’는 전쟁위기를 무기한 재생산시킬 것이므로, 안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평화 있는 안보’가 꼭 필요함.

» 셋째, ‘통일 없는 안보’도 현재와 같이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위기를 무기한 재생산시킬 것이므로, 안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도 병행하여 모색하는 ‘통일 있는 안보’가 꼭 필요함.

---

● 또한 ‘평화 없는 통일’은 민족상잔과 국토파괴를 동반하므로 반드시 통일은 평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또한 평화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기회도 증대할 것임.

≫ 여기서 ‘안보’를 중시하는데, 군사력 증가는 필수적이면서도 안보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야기하는 소모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 한편, 외교부문은 동맹,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등을 통해 적은 투입비용으로 높은 전쟁방지의 안보 성과를 거둘 수 있어, 특히 외교 전략과 외교역량의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다. 장기적 대북 유인책으로 경수로 제공 가능성 검토

≫ 장기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통일한국의 에너지정책과 경제 공동체를 위한 경수로 공급을 검토할 것을 제기함.

● 북한의 모든 원자력 프로그램은 핵개발용이므로 어떤 평화적 이용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6자회담이 우선 가동되고 비핵화가 일정부분 진전된 이후 경수로 공급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

● 9.19 6자 공동성명(2005) 1조에서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기로 합의하고, 2.13 합의(2007) 2조에서 다시 9.19 공동성명의 1조(“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와 3조(“한국의 200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를 상기하면서,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이후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간주되나, 현재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과 이란 핵합의에서 평화적 원자력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서 검토할 것을 제기함.

---

## 라.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 개발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후속조치로 유엔 회원국 지위의 중지 또는 축출을 모색함.

- 유엔헌장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기술한 2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무력행사나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하는데, 북한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함.
- 유엔헌장 제5조에 따르면, “안보리가 취하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또한 6조는, “유엔헌장의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축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모든 재료, 기계, 기술을 전부 국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므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중국이 조달시장, 또는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수준 높은 수출 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북한의 핵물질과 핵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반확산’ 활동도 필요함.
-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중거리 (핵)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중장비 트럭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동 트럭의 용도 위반을 들어 재반출 하거나, 정비를 위한 부품의 공급을 철저히 차단함.
- 대부분 국가들이 LCD/LED 평면 TV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7차 당 대회에 앞서 김정은의 통치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LCD/LED TV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대부분 국가들은 대북 수출품의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해 최종소비자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캐치올(catch-all)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이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음.

---

● 그 외에도 세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사업, 국가주도의 노동자 수출 및 현금 수입, WMD 획득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고, 차단해야 할 것임.

≫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핵 비확산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지속해야 함.

● 다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협조 수준에 따라 제재와 압박의 수준을 조정토록 함.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